

# 하남시 지방재정계획 및 지방재정공시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	--

제출연월일 : 2016. 2. .

제 출 자 : 하 남 시 장

## 하남시 지방재정계획 및 지방재정공시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하 남 시  
【기획예산담당관】

### 1. 개정이유

- 「지방재정법」 개정(2014.05.28.)에 따라 위원회의 설치근거가 되는 법령 인용조항 및 기능·구성에 관한 사항 등을 상위법령에 부합하도록 개정하려는 것임.

### 2. 주요내용

- 가. 위원회 설치 근거가 되는 법령 인용조항 변경(안 제1조)
- 나. 공무원 위원이 전체의 4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함(안 제2조제2항)
- 다. 위원장을 부시장에서 민간위원 중 호선하도록 함(안 제2조제3항)
- 라. 위촉직 위원중 시의회 추천(시의원) 규정 삭제(안 제2조제4항)
- 마. 위촉직 위원의 임기를 2년에서 3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도록 함(안 제2조제5항)
- 바. 위원회의 심의 의결 사항 등 변경(안 제4조제2항)

### 3. 개정조례안 : 덧붙임

### 4. 신구조문 대비표 : 덧붙임

### 5. 관계법령 발췌서 : 덧붙임

- 「지방재정법」 제9조, 제32조의3, 제33조, 제60조, 「지방공무원법」 제2조

### 6. 예산수반 사항 : 해당없음

## 7. 입법예고 결과

가. 입법예고 기간 : 2015년 10월 15일 ~ 11월 4일(20일간)

나. 의견내용 : 의견없음

## 8. 부서협의 결과

가. 성별영향분석 평가 : 원안동의

나. 규제개혁관련 협의 : 원안동의

## 9. 기타 참고사항

○ 질의회신자료(행정자치부)

## 10. 관련부서 : 경기도 예산담당관

# 하남시 지방재정계획 및 지방재정공시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하남시지방재정계획및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하남시지방재정계획및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운영조례”를 “하남시 지방재정계획 및 지방재정공시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지방재정법」 제33조 및 동법시행령 제70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지방재정법」 제9조, 제33조 및 제60조에 따라”로 하고,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심의위원회”로 한다.

제2조제1항 중 “위원회”를 “하남시 지방재정계획 및 지방재정공시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로, “구성 한다.”를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은 성별의 균형을 고려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위원은 민간위원(「고등교육법」에 따른 국공립학교의 교원을 포함한다)과 공무원(「지방공무원법」 제2조제2항제1호의 일반직공무원을 의미한다)으로 임명 또는 위촉하되, 공무원인 위원이 전체의 4분의 1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부위원장은 안전자치행정국장이 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당연직 위원 : 안전자치행정국장, 도시건설국장, 기획예산담당관

2. 위촉직 위원 : 민간전문가, 대학교수 등 지방재정 및 투자사업분야에

대한 전문적 식견과 덕망을 갖춘 사람 중에서 하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촉하는 사람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시장은 위촉된 위원 중 본인이 사임을 원하거나 질병, 품위 손상 등 위원으로서 임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임기 중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제4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특별회계 신설 및 존속기한 연장에 관한 사항(다만,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운영되는 특별회계는 제외한다)
2.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수립 등에 관한 사항
3. 지방재정 운용상황의 공시에 관한 사항
4.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위원회가 심의하도록 규정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5조제3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조제2항 중 “예산담당”을 “예산팀장”으로 한다.

####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서명		기획예산담당관
입 안 자	부서장 직위·성명	기획예산담당관 진영애
	팀장 직위·성명	예산팀장 조남준
	담당자 성명·전화번호	안진섭 (790-5340)

##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하남시지방재정계획및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운영조례	하남시 지방재정계획 및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33조 및 동법 시행령 제70조의 규정에 의하여 하남시 지방재정계획 및 지방재정공시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9조, 제33조 및 제60조에 따라 하남시 지방재정계획 및 지방재정공시 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한다.	제2조(위원회 구성) ① 하남시 지방재정계획 및 지방재정공시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은 성별의 균형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중에 호선 한다.	② 위원은 민간위원(「고등교육법」에 따른 국공립학교의 교원을 포함한 다)과 공무원(「지방공무원법」 제2조 제2항제1호의 일반직공무원을 의미한다)으로 임명 또는 위촉하되, 공무원인 위원이 전체의 4분의 1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안전자치행정국장, 도시건설국장, 기획예산담당관이 되고, 위촉위원은 시의회 추천1인과 대학교수, 시민단체 대표, 관계 민간 전문가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③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부위원장은 안전자치행정국장이 된다.

현행	개정안
<p>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p> <p>⑤ 시장은 위촉된 위원중 본인이 사임을 원하거나 질병, 품위 손상 등 위원으로서 임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임기 중이라도 당해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p> <p>&lt;신설&gt;</p>	<p>④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p>1. 당연직 위원 : 안전자치행정국장, 도시건설국장, 기획예산담당관</p> <p>2. 위촉직 위원 : 민간전문가, 대학교수 등 지방재정 및 투자사업분야에 대한 전문적 식견과 덕망을 갖춘 사람 중에서 하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촉하는 사람</p> <p>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p> <p>⑥ 시장은 위촉된 위원 중 본인이 사임을 원하거나 질병, 품위 손상 등 위원으로서 임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임기 중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p>
<p>제4조(위원회운영) ① (생략)</p> <p>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p> <p>1. 지방재정 운영방향 및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p> <p>2. 투자사업 수립에 관한 사항</p>	<p>제4조(위원회운영) ① (현행과 같음)</p> <p>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p> <p>1. 특별회계 신설 및 존속기한 연장에 관한 사항(다만,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운영되는 특별회계는 제외한다)</p> <p>2.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수립 등에 관한 사항</p>

현행	개정안
<p>3. 재정공시 내용의 적정성과 공시방법 시기 등에 관한사항</p> <p>4. 그 밖에 시장이 부의한 사항</p> <p>&lt;신설&gt;</p>	<p>3. 지방재정 운용상황의 공시에 관한 사항</p> <p>4.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위원회가 심의하도록 규정한 사항</p> <p>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p>
<p>제5조(회의) ① ~ ② (생략)</p> <p>③ 위원회에 부의할 안건은 회의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미리 송부하여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lt;단서 신설&gt;</p>	<p>제5조(회의) ① ~ ② (현행과 같음)</p> <p>③ 위원회에 부의할 안건은 회의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미리 송부하여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제7조(간사) ① (생략)</p> <p>② 간사는 기획예산담당관 예산담당으로 한다.</p> <p>③ (생략)</p>	<p>제7조(간사) ① (현행과 같음)</p> <p>② 간사는 기획예산담당관 예산팀장으로 한다.</p> <p>③ (현행과 같음)</p>

## 【 관계법령 발췌서 】

### □ 지방재정법

**제9조(회계의 구분)** ① 지방자치단체의 회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한다.

② 특별회계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직영기업이나 그 밖의 특정 사업을 운영할 때 또는 특정자금이나 특정세입·세출로서 일반세입·세출과 구분하여 회계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에만 법률이나 조례로 설치할 수 있다. 다만, 목적세에 따른 세입·세출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별회계를 설치·운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4.5.28.>

③ 지방자치단체가 특별회계를 설치하려면 5년 이내의 범위에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운용되는 특별회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4.5.28.>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회계를 신설하거나 그 존속기한을 연장하려면 해당 조례안을 입법예고하기 전에 제33조제9항에 따른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운용되는 특별회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4.5.28.>

**제32조의3(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① 지방보조금에 관한 사항을 전문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 소속으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위원은 민간위원(「고등교육법」에 따른 국공립학교의 교원을 포함한다)과 공무원(「지방공무원법」 제2조제2항제1호의 일반직공무원을 의미한다)으로 임명 또는 위촉하되, 공무원인 위원이 전체의 4분의 1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⑤ 민간위원의 임기는 3년 이내에서 조례로 정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4.5.28.]

**제33조(중기지방재정계획의 수립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재정을 계획성 있게 운용하기 위하여 매년 다음 회계연도부터 5회계연도 이상의 기간에 대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여 예산안과 함께 지방의회에 제출하고,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까지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5.28., 2014.11.19.>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중기지방재정계획(이하 “중기지방재정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때에는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계획수립 절차 등에 따라 그 중기지방재정계획이 관계 법령에 따른 국가계획 및 지역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5.28., 2014.11.19.>

③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신설 2014.5.28.>

1. 재정운용의 기본방향과 목표
2. 중장기 재정여건과 재정규모전망
3. 관련 국가계획 및 지역계획 중 해당 사항
4. 분야별 자원배분계획
5. 예산과 기금별 운용방향
6. 의무지출(법령 등에 따라 지출과 지출규모가 결정되는 지출 및 이자지출을 말하며 그 구체적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하 같다)의 증가율 및 산출내역과 재량지출(의무지출 외의 지출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증가율에 대한 분야별 전망과 근거 및 관리계획
7. 제59조에 따른 지역통합재정통계의 전망과 근거
8. 통합재정수지[일반회계, 특별회계 및 기금을 통합한 재정통계로서 순(純) 수입에서 순 지출을 뺀 금액을 말한다] 전망과 관리방안
9. 투자심사와 지방채 발행 대상사업
10.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④ 행정자치부장관은 매년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지침을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할 수 있다. <신설 2014.5.28., 2014.11.19.>

1. 국가의 재정운용방향
2. 관련 국가계획 및 지역계획
3.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그 밖의 정보
4.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의 기준

⑤ 행정자치부장관은 관계 중앙관서의 장에게 제4항에 따른 지침의 작성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중앙관서의 장은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신설 2014.5.28., 2014.11.19.>

⑥ 행정자치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각 지방자치단체의 중기지방재정계획을 기초로 매년 종합적인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고, 국무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행정자치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3.7.16., 2014.5.28., 2014.11.19.>

⑦ 행정자치부장관은 제6항에 따라 종합적인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국가재정법」에 따른 국가재정운용계획과의 연계성을 높일 수 있도록 관계 중앙관서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신설 2014.5.28., 2014.11.19.>

⑧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2항·제6항 및 제7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4.5.28.>

⑨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수립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자문에 응하도록 하기 위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에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4.5.28.>

⑩ 제9항에 따른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4.5.28.>

⑪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되지 아니한 사업에 대해서는 제37조에 따른 투자심사나 지방채 발행의 대상으로 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할 때에 반영하지 못할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신설 2014.5.28.>

**제60조(지방재정 운용상황의 공시)**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 또는 결산의 확정 또는 승인 후 2개월 이내에 예산서와 결산서를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주민에게 공시하여야 한다.

1. 세입·세출예산의 운용상황(성과계획서와 성과보고서를 포함한다)
  2. 재무제표
  3. 채권관리 현황
  4. 기금운용 현황
  5. 공유재산의 증감 및 현재액
  6. 지역통합재정통계
  7. 지방공기업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경영정보
  8. 중기지방재정계획
  9. 제36조의2 및 제53조의2에 따른 성인지 예산서 및 성인지 결산서
  10. 제38조에 따른 예산편성기준별 운영 상황
  11. 제44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재정운용상황개요서
  12. 제55조제3항에 따른 재정건전화계획 및 그 이행현황
  13. 제87조의3에 따른 재정건전성관리계획 및 이행현황
  14. 투자심사사업, 지방채 발행사업, 민간자본 유치사업, 보증채무사업의 현황
  15. 지방보조금 관련 다음 각 목의 현황
- 가. 교부현황
- 나. 성과평가 결과
- 다.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변동사항
- 라. 교부결정의 취소 등 중요 처분내용
1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정 운용에 관한 중요 사항

② 제1항 각 호의 사항은 주민이 이해하기 쉽도록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작성하여야 하며,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항상 보거나 자료를 내려 받을 수 있도록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

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③ 제1항에 따른 공시 내용의 적정성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 소속으로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를 두되, 그 구성 등에 관하여는 제32조의3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는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로 본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공시한 내용을 공시한 날부터 5일 이내에 지방의회와 시·군·자치구의 경우는 시·도지사에게, 시·도는 행정자치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도지사는 관할 시·군·자치구의 내용을 포함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4.5.28.]

## □ 지방공무원법

**제2조(공무원의 구분)** ①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지방자치단체가 경비를 부담하는 지방공무원을 말하며, 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은 경력직공무원과 특수경력직공무원으로 구분한다.

② “경력직공무원”이란 실적과 자격에 따라 임용되고 그 신분이 보장되며 평생 동안(근무기간을 정하여 임용하는 공무원의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을 말한다) 공무원으로 근무할 것이 예정되는 공무원을 말하며, 그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12.11.>

**1. 일반직공무원:** 기술·연구 또는 행정 일반에 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2. 특정직공무원:** 공립 대학 및 전문대학에 근무하는 교육공무원, 교육감 소속의 교육전문직원, 자치경찰공무원 및 지방소방공무원과 그 밖에 특수분야의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서 다른 법률에서 특정직공무원으로 지정하는 공무원

3. 삭제 <2012.12.11.>

③ “특수경력직공무원”이란 경력직공무원 외의 공무원을 말하며, 그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12.11.>

### 1. 정무직공무원

가. 선거로 취임하거나 임명할 때 지방의회의 동의를 필요한 공무원

나. 고도의 정책결정업무를 담당하거나 이러한 업무를 보조하는 공무원으로서 법령 또는 조례에서 정무직으로 지정하는 공무원

2. 별정직공무원: 비서관·비서 등 보좌업무 등을 수행하거나 특정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법령에서 별정직으로 지정하는 공무원

3. 삭제 <2012.12.11.>

4. 삭제 <2011.5.23.>

④ 제3항에 따른 별정직공무원의 임용조건, 임용절차, 근무 상한연령,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또는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1.5.23., 2012.12.11.> [전문개정 2008.12.31.]

## 【 기타 참고자료 】

### □ 질의회신

####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민간위원으로 “지방의회 의원” 위촉가능 여부 (2014. 12. 31)

우리부 홈페이지(국민신문고)를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지방재정법」 제32조의3제3항은 ‘…위원은 민간위원(「고등교육법」에 따른 국공립대학교의 교원을 포함한다)과 공무원(「지방공무원법」 제2조제2항제1호의 일반직공무원을 의미한다)으로 임명 또는 위촉…」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위원은 민간위원과 공무원으로 구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질의하신 지방의원의 경우「지방공무원법」 제2조제3항제1호에 규정된 정무직 공무원 신분이므로 민간위원에 위촉할 수 없을 것입니다. 또한 일반직공무원에 해당하지 않아 공무원 신분으로도 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위촉이 제한된다 할 것입니다.

입법취지가 예산의 편성 과정에 참여하는 위원회의 성격을 고려할 때 예산 심의 권한을 가진 지방의원이 참여할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의 예산편성 권한이 침해될 것을 우려, 지방의원의 참여를 제한한 것이라 할 것입니다. 법 제정초기 법규 해석에 따라 상반된 의견이 다소 있었고,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지방의원을 위촉할 여지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해당 조문의 취지를 고려하여 향후 실제 지방보조금심의가 있기 전까지 위원 변경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시고, 귀 자치단체에서 이미 제정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도 빠른 시일 내 개정하여 주시면 될 것입니다.

#### 지방재정법 제37조의2 규정 해석 (2015.03.05.)

○ 지방재정 투자심사제도에 관심을 갖고 질의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 최근 개정('14. 5.28. 공포, '14.11.29. 시행)된 '지방재정법'에 따라 지방재정투자심사 위원회(동법 제37조의2)도 위원장을 민간위원 중에서 위촉하고, 민간위원 비중을 3/4 이상으로 하며, 공무원 위원의 범위서 지방의회 의원은 배제하는 등 동 위원회 운영의 전문성 및 투명성을 강화시켰습니다.

○ 또한,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하여는 '지방재정법' 제32조의3 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지방보조금심사위원회관련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 재정투자심사위원회관련 규정은 원칙적으로 '지방재정법' 제37조의2 규정을 따르되 다만, 구체적인 동 위원회 구성·운영과 관련한 세부적인 사항은 지방보조금심사위원회관련 규정인 지방재정법 제32조의3 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준용하는 것입니다.

○ 결론적으로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와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는 별개의 위원회이나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 구성·운영에 있어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규정을 준용하는 것입니다. 다만, '지방재정법' 제37조의2 제1항 단서규정을 근거로 조례에 '지방보조금심의 위원회'가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 기능도 대신 수행한다고 규정한다면 별도로 2개의 위원회를 운영하지 않고 1개의 위원회로 통합하여 구성·운영할 수 있습니다.